

온실가스, 감축정책 재검토 “대립”

경기침체로 산업계 불만 높아 ... 2014년 9월 정상급회의가 분수령

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정부가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

대한상공회의소 환경기후위원회는 7월3일 국회에서 <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>를 개최했다.

노동운동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<기후변화협상 국제동향> 발표에서 “2020년 출범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전망”이라며 “2014년 9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재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급회의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”고 밝혔다.

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원장은 “법안제정 시점에 비해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”이라며 “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시기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

토론회에는 유기준, 박성호, 이한성, 조현용 등 국회의원 10명과 산업계에서 이경훈 포스코에너지 부사장, 이태영 KC코트렐 사장,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전무, 권순영 한국남동발전 기술본부장 등 환경담당 임원 20명이 참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7/03>